



국제사회보장동향

Global Social Security Trends

코로나19 이후 주거 안정성을 위한 미국의 주거 관련 정책 | 김령희

일본의 주거 지원 정책: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를 중심으로 | 마쓰시타 마나

미국 학자금 대출 위기와 부채 담감 정책에 대하여 | 김태근

독일의 아동 긴급추가수당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논의 | 정다운

프랑스의 한부모가족 정책과 마크롱 정부의 정책 방향 | 김진리

자살 및 위기 상담 번호 988 개통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의 변화: 뉴욕주를 중심으로 | 손해인

독일의 아동 긴급추가수당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논의

German Discussions on the Emergency Supplemental Child Allowance and
the Basic Child Security

정다은(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1. 들어가며

2021년 12월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독일 대연정은 연정협약서(Koalitionsvertrag)를 통해 독일 연방이 추진해야 할 중대 과제 중 하나로 '아동과 청소년의 기회균등(Chancengleichheit) 보장'을 제시하였다(SPD, GRÜNE & FDP, 2021). 이의 주된 배경이 된 것은 독일의 아동빈곤 상황이다. 최근 독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약 180만 명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구직자 기초생활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의 수급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중 45.3%에 해당하는 약 80만 명이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것

로 파악되었다(Bundesregierung, 2022a). 또한 약 54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주택수당(Wohngeld)을 수급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고, 이 중 약 12만 2천 명은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빈곤 상황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의 수가 약 280만 명, 아동빈곤율이 약 2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ndesregierung, 2022a). 새로운 대연정은 이러한 아동빈곤 상황에 직면하여 빈곤을 감소를 통한 아동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아동 관련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아동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

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SPD, GRÜNE & FDP, 2021), 독일 사회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 기초생활보장이 도입되기 전인 과도기 상황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아동 긴급추가수당(Sofortzuschlag)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동 긴급추가수당을 중심으로 독일의 아동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아동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주요 아동 지원 정책의 현황

가. 아동수당과 아동추가수당

독일에서는 보편적 급여로서의 아동수당(Kindergeld)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재산 등과 상관없이 독일 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데, 만 18세까지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8세가 넘은 경우 실직자에게는 21세까지, 학생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에게는 25세까지 지급될 수 있다(Familienkass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2a). 2021년 전년 대비 15유로(약 2만 원)가 인상된 이후 2022년 현재에는 2021년과 동일한 급여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월 219유로(약 30만 원), 셋째 자녀에게는 월 225유

로(약 31만 원), 넷째 자녀부터는 월 250유로(약 34만 원)가 지급되고 있다.

보편수당인 아동수당과 달리 2005년에 도입된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은 선별적 급여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만 25세까지 자녀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과 함께 아동추가수당 또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소득이란 부모의 급여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최저소득 수준을 뜻하며, 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최저소득 기준(Mindesteinkommensgrenze)은 각각 세금 공제 전 월 900유로(약 122만 원), 월 600유로(약 81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추가수당의 구체적인 급여액은 아동의 나이, 부모의 한 달 수입, 거주지 월세액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2022년 1월부터 아동 한 명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급여는 현재 209유로(약 28만 원)에 달한다(Familienkass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2b).

나. 아동 긴급추가수당의 도입

2022년 3월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 기초생활보장이 도입되기 전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과도기 정책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20유로(약 2만 8천 원)를 추가 지급하는 아동 긴급추가수당의 도입을 계획하였다. 두 달여 후인 5월 12일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급여권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과 아동 긴급추가수당의 규율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eines Sofortzuschlages für Kinder und einer Einmalzahlung an erwachsene Leistungsberechtigte der sozialen Mindestsicherungssysteme aus Anlass der COVID-19-Pandemie)」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등이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2권(구직자 기초생활보장), 제12권(사회부조) 또는 망명신청자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에 따른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추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액에 더해 매월 20유로의 긴급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Bundesregierung, 2022b).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아동추가수당의 최대액은 긴급추가수당 도입에 따라 7월 1일부터 229유로(약 31만 원)로 상승한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구상한 지급액 수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2). 특히 좌파당(Die Linke)은 월 20유로라는 긴급추가수당이 아동빈곤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월 100유로로 인상할 것과, 소급하여 2022년 1일부터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복잡한 지급 방식 또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LINKE, 2022).

3.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논의

가. 기존의 논의

독일에서 아동 기초생활보장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 대연정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아동 기초생활보장 도입을 통해 아동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사회민주당, 녹색당(GRÜNE: Bündnis 90/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소속 정당이자 장기간 집권당이었던 독일기독민주연합(CDU: Deutsche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과 자매 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CSU: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의 반대로 그간 연방의회에서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2019년 10월 녹색당은 독일 연방정부에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GRÜNE, 2019), 독일기독민주연합과 기독교사회연합이 사회급부는 구체적인 필요와 일정 급부

요건의 충족에 따라서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녹색당의 제의를 거부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9).

나. 현재의 논의

2021년 10월에 치러진 연방의회선거(Bundestagswahl)에서 사회민주당이 기독교민주당을 꺾고 집권당이 되고, 녹색당 또한 14.8%의 득표율을 얻어 연방의회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아동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논의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이루어진 현 대연정의 중대 과제로 선정되었다. 대연정은 연정협약서를 통해 아동수당, 아동추가수당, 독일 사회법전 제2권과 제12권에 따른 사회수당(Sozialgeld) 등 각기 다른 신청 절차에 의해 따로 지급되어 오던 다양한 아동 관련 급부들을 새로운 일괄급부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 의해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하였다(SPD, GRÜNE & FDP, 2021). 또한 연정협약서에 따르면 아동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 보장액(Garantiebetrag)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추가액(Zusatzbetrag)으로 구성되는데,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 3월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연방노동·사

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의 5개 부처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아동 기초생활보장의 구체적인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워킹그룹의 최종 보고서 제출은 2023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Bundesregierung, 2022c). 이와 관련해 사회민주당은 아동 기초생활보장의 월 기본액(Basisbetrag)을 250유로(약 34만 원)로 하고,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추가 지급 부분의 최대액을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최대 월 150유로(약 20만 원), 6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최대 208유로(약 28만 원), 14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최대 228유로(약 31만 원)를 지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SPD, 2022). 녹색당은 기본 보장액을 290유로(약 39만 원)로 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장 추가액(Garantieplus-Betrag)의 최대 지급액을 5세 이하의 아동은 119유로(약 16만 원), 6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은 188유로(약 25만 원), 14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257유로(약 35만 원)로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연정 구성 정당들의 아동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기본 구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당론이 워크그룹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구상에 절충적으로 반영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4. 나가며

독일에서 아동 기초생활보장 도입에 관한 논의는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시작 단계이며, 아동 긴급추가수당 도입은 아동 기초생활보장 도입 전에 아동빈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두 달여 만에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들 정책의 목표는 독일의 아동빈곤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아동에게 교육,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에 있다. 특히 아동 기초생활보장은 전 연방가족부 장관 안네 슈피겔의 말처럼 “과거 급부 위에 새로운 라벨(Label)”을 붙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동 관련 사회보장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ZEIT, 2022), 워크그룹에 의해 아동 기초생활보장의 구상이 완료될 2023년 말까지 독일 사회에서 아동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독일 정치권 일부와 사회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대연정의 아동빈곤 대응 의지는 매우 확고해 보인다. 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지급액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과 전달 주체의 대대적인 변화 또한 의도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아동 정책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아동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독일의 정책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undesregierung. (2022a). Entwicklung von Kinderarmut im Rahmen der Corona-Krise - Weitere Entwicklungen und neue Daten. *Drucksache 20/1272*. Retrieved from <https://dserver.bundestag.de/btd/20/012/2001272.pdf>
- Bundesregierung. (2022b).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eines Sofortzuschlages für Kinder und einer Einmalzahlung an erwachsene Leistungsberechtigte der sozialen Mindestsicherungssysteme aus Anlass der COVID-19-Pandemie. *Drucksache 125/22*. Retrieved from <https://dserver.bundestag.de/brd/2022/0125-22.pdf>
- Bundesregierung. (2022c). *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 zur Konzeption der Kindergrundsicherung*. Retrieved from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95162/7b675eec1203797e19247d629c49d6f9/aufakterklaerung-ima-data.pdf>
- Deutscher Bundestag. (2019). *Koalition uneins über Grünen-Vorschlag zur Kindergrundsicherung*. Retrieved June 17, 2022, from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9/kw43-de-kindergrundsicherung-663282>
- Deutscher Bundestag. (2022). *Bundestag stimmt für Kinderzuschlag und Einmalzahlung*. Retrieved June 17, 2022, from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19-de-sofortzuschlagsgesetz-891898>

-
- Familienkass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2a). *Merkblatt Kindergeld*. Retrieved from <https://www.bmfsfj.de/resource/blob/94320/2fcf77b34c2ccdef5573538fccde7a9/merkblatt-kindergeld-data.pdf>
- Familienkass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2b). *Merkblatt Kinderzuschlag*. Retrieved from <https://www.bmfsfj.de/resource/blob/94322/6ec2c24088499861eb39fd85e161d7a4/merkblatt-kinderzuschlag-data.pdf>
- GRÜNE. (2019). Faire Chancen für jedes Kind – Kindergrundsicherung einführen. *Drucksache 19/14326*. Retrieved from <https://dserver.bundestag.de/btd/19/143/1914326.pdf>
- LINKE. (2022). Regelsatz ehrlich berechnen – Sonderzahlungen reichen nicht aus. *Drucksache 20/1502*. Retrieved from <https://dserver.bundestag.de/btd/20/015/2001502.pdf>
- SPD, GRÜNE & FDP. (2021). *Mehr Fortschritt Wagen –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Koalitionsvertrag 2021–2025.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4430/1990812/04221173eef9a6720059cc353d759a2b/2021-12-10-koav2021-data.pdf?download=1>
- SPD. (2022). *Bei uns kommen die Kleinen gross raus* – SPD-Konzept für Kindergrundsicherung. Retrieved June 17, 2022, from <https://www.spd.de/aktuelles/kindergrundsicherung-news/>
- ZEIT. (2022). *Ministerin: "Kindergrundsicherung wird Paradigmenwechsel"*. Retrieved June 17, 2022, from https://www.zeit.de/news/2022-01/29/ministerin-kindergrundsicherung-wird-paradigmenwechsel?utm_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kr%2F